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5.(수)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현미	☎044-300-7030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중앙행정기관 31곳 세종 이전… 이제는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 2027년까지 22개 기관, 2031년까지 9개 기관 이전… 일정·재원 관리체계 구축 촉구 –

– 주거·교육·돌봄·교통 등 정착 지원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 실현 위한 3대 과제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4일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총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5,460명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2개 기관 1,600명은 임차청사를 확보해 2027년까지, 나머지 9개 기관 3,860명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고시는 이전 대상과 시기,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도 정부의 이전 일정에 맞춰 준비사항과 담당 부서,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관별 이전 일정과 세종시의 준비계획을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임차청사 입주에 필요한 업무시설·보안체계·교통 접근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축청사는 부지 확보부터 설계·공사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차청사 이전 비용 약 482억원과 신축청사 건립 비용 약 1조6천억원은 추정치인 만큼 연차별 재원 확보와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과 가족의 실제 이주 수요를 반영한 정착 지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460명이 공무원 정원 기준이라는 점을 짚으며, 실제 이전 인원과 가족 동반 이주 규모를 조사해 주거·전입학·돌봄·교통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 전입학 문제는 가족의 이주 시기와 거주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학년별 수요와 학교 수용 여력을 미리 확인하고 학급 배치·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차청사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 출퇴근 교통 여건을 점검하고 기존 시민의 생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가 운영 중인 16개 부서 참여 지원 TF에 대해서도 기관별 이전 일정에 맞춰 담당 과제와 완료 기한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주거·교육·돌봄·교통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세종 중심 국정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청사 입주와 인원 이동을 넘어 주요 보고와 회의가 세종에서 이루어지는지,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되는지, 수도권 출장 부담이 줄어드는지까지 이전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다. 아울러 임차청사와 향후 신축청사의 연계 배치, 이전 과정에서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고시로 이전 대상과 완료 시점이 제시됐다”며 “세종시의 대응도 담당 부서, 추진 기한, 협의 과제가 명확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도 세종시가 맡아야 할 역할과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